

사회

인화학교 재산 증여 처리 관심 집중

광주시 18일까지 의견 수용여부 결정 대책위 “증여에 ‘욕심’ 포함돼 있어 반대”

광주시가 ‘도가니’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인가 취소 통보’와 ‘자진해체 후 재산증여’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인가를 취소하게 되면 법인회 행정소송이 불가피한데다 법인 재산증여에 대해서는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광주시의회 등에서 반대하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석법인이 이날로 예정된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통보를 앞두고 지난 11일 “법인을 해체하고 재산을 종교단체에 증여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오

는 18일까지 의견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광주시는 지난 13일 오후 인화학교 대책회의를 열어 허가 취소 통보일을 연기했으나 광주시와 인화학교대책위, 광주시의회 등의 의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광주시가 우석법인의 ‘자진 해체 후 재산 증여’ 의견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려 우석법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1~2년이 걸리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자진 해체 후 재산 증여’ 의견을 수용할 경우 인화학교대책위 등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우석법인이 그들

의 재산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석법인 인가 취소 이후 지방 정부에 귀속된 재산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조만간 담당 공무원을 우석법인에 보내 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57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우석법인의 전 재산을 천주교광주대교구가 관장하는 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는 사유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우석법인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

해 “당 법인의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대한 증여는 일체 아무런 조건이 없다. 즉 당 법인의 증여는 설립자의 친인척 및 현 우석 이사진 관여나 법인 산하시설 종사자의 고용관계 등 일체 아무런 조건이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지만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실 관계와 타당성을 파악한 뒤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우석법인에게 이를 통보, 법인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석법인이 자진해체할 경우에도 인가는 취소되기 때문에 법인인가 취소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며 “우석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우석법인 재산 57억

법인 인가 취소편 재산 광주시 귀속

인화학교 우석법인이 지난 11일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법인의 인화학교, 인화원 등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포함한 감정평가액은 5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04년 같은 규모의 감정평가액인 27억여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우석법인은 법인을 자진 해체하고 종교단체에 재산을 증여하는 이유를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가 가톨릭의 숭고한 종교적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취지 및 목적인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봉사를 잘 구현

해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우석법인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면 법인은 자진 해체되고 모든 재산은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등에서는 법인측이 재산을 증여하려는 데는 ‘속뜻’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가 우석법인의 ‘자진해체 후 종교단체에 재산증여’에 대한 불가 방침을 결정하고, 법인 인가 취소 통보를 하면 모든 재산은 광주시로 귀속돼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산위원회가 구성돼 위탁·직영, 다른 목적의 사업 추진 등을 결정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음주단속 피하려다 사고 차량 두고 도주 40대 추적

40대로 보이는 두명의 남성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주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인근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운전하던 32허4XXX 쏘울 승용차가 인근에 주차중이던 그랜저XG와 로제 승용차 등 2대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달아났다.

사고 당시 평화공원 인근에서는 서부경찰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이었으며 32허4XXX차량은 음주단속 직전 방향을 바꿔 달아나다가 인근에 주차중인 차량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인기자 kki@



‘나라사랑 보급자리사업’ 선정 김현수 의원. 14일 오후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왼쪽), 고성군 31사단장 및 각계 인사들이 새롭게 단장된 담양군 월산면 신거리 김현수 의원의 집을 둘러보고 있다. 김 의원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육군에서 추진중인 ‘나라사랑 보급자리 사업’의 광주·전남 첫 수혜자로 선정됐으며, 이날 준공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들 취직시켜 주겠다” 국유지 불하받게 하겠다 마을 주민 속여 수억 가로채

무안경찰은 14일 이웃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준다고 속이는 등 같은 마을 주민 4명으로부터 갖가지 구실로 수억원을 가로챈 최모(50·무안군 현경면·부곡)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이웃 주민인 박모(65)씨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장을 통해서 아들을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았

다.

최씨는 또 다른 주민 2명에게도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구실로 2억원 가량을 건네 받았으며, 또다른 주민에게는 한우 3마리를 팔아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마을에 가족만 남겨둔 채 잠적한 뒤 영광, 정읍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한 최씨를 지난 9일 붙잡았다.

/서부취재본부 김민준기자 jun@

부인 감금 강제 성관계 부부간 강간 인정 징역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운 부장판사)는 14일 부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윤모(5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이 넘게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감금·폭행해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했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흥기를 사용한 점에 비추볼때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25분께 전주시에 자신의 집에서 외박을 하고 귀가한 아내를 폭행하고 방에 가둔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취재본부 김철수기자 knews@

선재성 판사 항소심 서울고법 결정

대법원, 사상 첫 관할이전 인용

법원이 법정관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을 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맡아달라며 낸 관할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전국 최초로 제기

된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선재성 판사 사건은 관할이전이 인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비밀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깍으면 안돼”... 대놓고 금품 요구?

광주 총인시설 담합비리 녹취록 공개 파장

檢 “녹취록 본격 수사 수준 아니다” 논란

공사액이 982억원에 이르는 광주시의 총인처리시설(오염저감시설)과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과 선정 업체 간 ‘검은 거래’ 가능성을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녹취록은 광주지검에 총인시설 업체 선정 수사를 요구한 시민단체 참여자 21이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광주지검은 녹취록 전반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진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와 참여자 21 등에 따르면 총인시설 업체 선정 심사위원

인 광주시 서기관 반모씨는 업체 선정 이후인 지난 5월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식당에서 대립산업 관계자, 또 다른 사업자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날 반씨는 “깍으면 안 된다, 달러”, “X짜리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니 안 된다”고 하는 등 대립산업 관계자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전 조율 과정도 상세히 언급했다.

반씨는 “시 고위 관계자가 입찰에 선정된 업체를 소개했고 자신이 대립산업을 밀어준 것을 감추기 위해 의

도적으로 다른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반씨 등의 대화에는 정보기관 관계자, 공무원 심사위원 등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반씨가 이날 식당에서 발언한 내용은 1시간 30여 분 분량으로 녹취됐다.

이와 관련 반씨는 “대립산업 관계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당시 대립산업 관계자에게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전기 공사를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시 고위 관계자와 정보기관 관계자를 거론한 것은 대립산업 관계자에게 중압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체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고위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를 만나 공사수주를 청탁한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검찰 역시 그동안 참여자 21이 지난달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준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참여자 21이 제출한 녹취파일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내사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녹취록이 공개되자 가운데 시장의 지시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인 방류 허용치를 ㄹ 당 2mg에서 0.3mg으로 낮추기 위한 시설공사로, 지난 3월 단기(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돼 대립산업 컨소시엄이 1순위 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진월동 아파트 440세대 정전

14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대형 아파트단지 440여 세대가 정전돼 주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구내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일부 세대에 비상 전력을 공급했다.

이와 함께 정전이 발생했으나 아파트 내 자가발전기가 가동돼 승강기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 선풍적 인기

밝기는 2배!! ★ 전기료는 절감!! ★ 눈부심 방지로 확실한 시력보호!!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1. 쉬운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2. 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조명의 질적향상)
3. 최대 50~100%의 조도향상
4. 전기요금 최대 50%절감
5. 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기능
6. 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7. 친환경제품(PP,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8. 변색이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광주,전남 시/군/구
대리점/취급점 목록

(주)우림네트웍스
1599-9093
www.donbandi.net